

-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7.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청렴감사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청렴감사실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19. 8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설정한 경우 결과적으로 신고에 제한을 초래하므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현행] 3년에서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일반 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로 설정하여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안 제4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2조제1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수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였습니다.
- 안 제12조제1항 중 '성명을 도용하여'를 '성명으로'로 수정하였습니다.
- 안 제15조제1호 중 '판명되거나'를 '밝혀지거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였습니다.

☐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0. 5. 11일부터 6.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 2020. 6.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부조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82041
----------	---------

제출년월일: 2020. 7. 3.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청렴감사실장)

1.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19. 8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설정한 경우 결과적으로 신고에 제한을 초래하므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안 제4조)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현행] 3년에서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일반 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로 설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69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0. 5. 11.~6. 1.): 의견 없음
- 2) 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4조 중 “신고는 부조리행위”를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로, “3년이 되는 날”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성명을 도용하여”를 “성명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판명되거나”를 “밝혀지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과 구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지요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u>공무직근로자</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신고기한) ----- <u>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u>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제9조(신변보호) ① (생략)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변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그 밖의</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	제12조(허위신고) ① -----

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생략)

제15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 7. (생략)

----- 성명으
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급제외) -----

-----.

1. -----
--밝혀지거나-----

2. -----
---- 그 밖의 -----

3. ~ 7.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